

‘싸우다 끝난’ 5월 국회 6월도 추경·민생 뒷전?

문재인 정부 추경안 중 최장기 국회 표류 불가피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조건없는 국회정상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의 국한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표류 중인 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의 6월 국회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

국회법에 따라 매해 6월1일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구와 각 당 지도부의 공세적 발언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16일에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날 31일 민주당은 6월3일 임시국회 개최를 목표로 교섭단체 3당 간 원내대표 회동을 한국당에 제안했지만 일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국회 정상화 담판을 갖고자 했지만 한국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협상 추진에 반발하며 불발된 것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의 3일 개원은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흘 전에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는 '플랜B'를 잠시 보류하고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플랜A'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플랜B'는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접었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처리 시간표도 뒤로 밀리고 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5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6월 중순으로 목표표를 연기했다. 다만 이는 3일부터 국회로 정상화한다는 가정에서 2주 정도의 추경 심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뒤로 더 밀릴 수도 있다.

일단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월5일 편성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5일 만인 5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경 역시 7월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45일이 걸렸다.

2일로 국회 제출 39일째인 이번 추경은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45일을 넘어야 하게 된다.

특히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실제 본회의 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 중 산불·지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관련 추경만 떼어내 논의하지는 않겠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매달 빈손 국회를 이어온 가운데 6월 임시국회 기상도까지 흐려지면서 추경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의 장기 표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가뭄 관련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등 국회 정상화 합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을 얼마나 좁혀느냐다.

한국당은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수용 불가'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문에 담긴 '사과' 또는 '유감' 표현의 수위,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 등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번 주말에도 합의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6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하려 해도 교섭단체 간의 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바람 잘 날 없는 바른미래...하태경 징계로 또 내분 치달나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바른미래당이 또 다시 내분이 발발할 위기에 처했다. 손학규 당대표에게 '정신 퇴락'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손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됐고, 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제소된 유승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소명 기회를 1회 이상

이 지도부 결정에서 손 대표와 각을 세우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권파는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5명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최고위 구성이 4대4로 꾸러지게 되면 손 대표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당헌당규에는 "최고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반 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바른정당계 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결권을 뺏으려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 의회에서 23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퇴진 관련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 발언을 한 뒤 손 대표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리위, '정신퇴락' 발언 하태경 의원 징계절차 개시 바른정당계 "사당화 위해 의결권 뺏으려는 것" 비판 오신환 "친손무죄 반손유죄...편파적 결정" 강력 반발

줘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하태경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도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계는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하태경 최고위원직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윤리위를 활용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최고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만약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 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현재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손학규 대표는 당 내분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권한과 위원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주장하는 반면, 손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외부인사 영입을 우선시키고 자신의 퇴진 논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부딪히는 이유도 손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을 겨냥 "꼭두각시들

데리고 한국당으로 들어가라"라고 비판해 제소됐다. 바른정당계는 송태호 윤리위원장이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속이란 점 등을 들어 윤리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파적 결정으로써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며 "손 대표를 비난한 하태경 최고위원만 징계절차에 회부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친손무죄 반손유죄의 논란을 일으킨다. 과연 꼭두각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편파심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위원장 임명 당시에는 자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을 겨냥 "꼭두각시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황교안, 이제는 '정책투쟁'...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자유한국당이 오는 4일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민생투쟁의 후속 조치로 경제투쟁의 길을 선언한 셈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겠다"며 "국민속으로 민생대장정의 길을 걸었다"며 "이제 국민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라

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 비전 2020과 함께 '활기찬 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경제비전을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국민 참여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는 물론 국민 참

여단을 구성해 정책수립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수시로 현장을 찾아 타운홀 미팅과 현장검증을 통해 경제비전의 실행력을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조속히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계획을 완성하겠다"며 "이것은 우리 한국당의 경제살리기 패다가 될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하철역, 카페, 공공기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